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2016년도 제1회 합격자 221명 배출

≠1. 다른 학교에서는 밀링머신 등 필수장비가 부족해서 실습을 자주 할 수 없는데, 우리 학교는 장비를 여러 번 만져보고 돌려볼 수 있어서 정말 신났어요. 진도가 나갈수록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덕분에 잘 나가는 기계 제작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 할 만큼 능력자가 된 것 같아요.

(기계가공조립기능사 합격자 광주공업고 3학년 김민상, 피스텍코(주) 취업예정)

≠2.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니 학생들의 실력이 쑥쑥 향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장에 투입해도 바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있어요.

(광주공업고 NCS 기반 교육 및 과정평가형자격 과정 담당 부장교사 이동승)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장 박영범)은 12일(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221명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에는 광주공업고, 한국디지털직업전문학교 등 24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11개 종목에 420명이 응시하였으며, 최종 합격률은 52.6%로, 지난 해 29.3% 보다 23.3%p 상승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와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지고 있고,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평균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높은 합격률을 보인 광주공업고 및 부산자동차고는 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는 모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를 마친 특성화고 학생들은, “예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려면 학교 공부 외에 별도로 시험공부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바로 자격을 딸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와 공단에서 산업현장 전문가(기업체, 학계 등)가 참여·실시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하게 된다.

검정형 자격이 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과정평가형 자격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현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2016년 현재 기계·전자 등 30종목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자동차정

비·조리 등 31종목이 추가되어 총 61종목을 시행하는 등 점차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에서 과점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선호하는 것은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고, NCS 기반의 교육·훈련을 통해 특정한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

며, “합격률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도 과점평가형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과점평가형 자격이 산업현장과 교육·훈련을 연계할 수 있는 명품자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8.25.(목)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

- 조선업 실직(예정)자와 가족에게 생계지원 및 재취업 종합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와 거제시는 조선업종 근로자와 기업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거제시 서문로5길 6, 국민은행 3층)를 설치하고, 8.25.(목)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지난 6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가 추진된 것으로, 지난 7월 말 울산(7.28.)을 시작으로, 창원(7.29.), 목포(8.1.)에 이어 거제에서 네 번째 「조선업 희망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에서는 16개 기관 46여명의 직원이 조선업종의 실직(예정)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에는 경영·금융문제 해소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대상 서비스) 조선 협력업체 등에서 실직한 근로자와 실직가정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상담·진단 → 직업능력개발 →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복지서비스, 서민 금융상담 및 전직지원 서비스(3~6개월)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歸農歸村), 귀어귀촌(歸漁歸村)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대상 서비스) 또한, 「조선업 희망센터」에서는 중소 조선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기업을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우선 협력업체 등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업황 회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을 위한 상담 및 자금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권민호 거제시장,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한표 국회의원, 원경희 거제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하여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업 희망센터의 서비스가 조선업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역의 노·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구축, 원·하청 상생협력,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가 조선업 근로자와 시민, 그리고 지역경제에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거제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 이어 고영선 차관은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제2차 조선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상황과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조선업 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에는 임금체불 스톱!

- 8.31.~ 9.13.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8.31.부터 9.13.까지(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

특히, 금년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

방화등을 강화한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 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대응 처리하며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년 추석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임금지급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지연이자제 확대, 부가금 제도 등 법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